

노조파괴, 구조조정이 문 정부의 노동 존중인가?

금속,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 ... “자본 대변 노동부 필요 없다”



금속노조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들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노동자 해고 살인을 막으라며 고용노동부를 압박하는 공동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6일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자본을 대변하는 노동부는 필요 없다”라며 ‘금속노조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코로나 19 위기를 틈타 노조파괴, 정리해고, 위장폐업, 자

본 철수 등에 나서는 사용자가 속출하고 있다. 자본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없음에도 재난을 틈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일탈 경영을 일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에 현장 주도권을 넘기는 노동정책 기조를 세우고, 코로나 19 노사정 합의안과 노조법 개악안 통해 이 정책을 관철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적폐 정권조차 시도하지 않은 악랄한 자본 위주 노동정책이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결의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 존중을 약

속했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다. 이렇게 많은 사업장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죽어가는데 이것이 노동 존중인가”라고 야단쳤다.

“문재인 정부, 철저한 자본 위주 노동정책 집행”

이날 결의대회에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서진), 대양판지지회, 대우버스·대우버스사무지회, 한국게이츠지회, 한국산연지회 등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해

‘해고는 살인,’ ‘노조파괴 중단’, ‘불법파견 철폐’ 등의 손 펼침막을 흔들며 각 사업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심진호 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지회장은 “오늘 이곳에 김진숙 동지의 복직 문제로 이 자리에 섰다. 35년 전 억울한 해고가 있었다. 수많은 노동자가 김진숙 동지의 투쟁으로 현장에서 돌아갔지만 자신은 아직 해고자 꼬리를 떼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심 지회장은 “사측은 산업은행이 반대한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이제 한진중공업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중훈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서진이엔지) 조합원은 “위장폐업으로 해고됐다. 사측은 노조 파괴를 위해 의도적으로 물량을 줄이고, 위장폐업을 시행했다”라고 규탄했다. 남 조합원은 “우리는 고용 승계를 위한 투쟁을 했으나 원청인 현대건설기계는 무시했다. 이에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고 외치고 있다”고 전했다.

고철민 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부지회장은 “현대차 자본은 불법파견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조합원들을 정규직 채용을 하기는커녕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울산으로 부당전보 발령했다”라며 “노동부가 법원 판결대로 조사하고 회사를 처벌하는 조처를 했다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훈 노조 대전충북지부 대양관지회 지회장은 “국감 출석 하루 전 대양관지 계열사 광신관지 신입사원 면접에서 금속노조를 악의적으로 소개하고, 어용 기업노조 가입을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라고 폭로했다.

김훈 지회장은 “노동악법의 근간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있기에 가능한 부당행위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괴물이 됐다”고 분노했다.

“사용자의 칼이 된 교섭창구단일화”

박재우 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지회장은 “355명이 한순간에 해고되어 가족까지 1만여 명이 넘는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노동부는 아직 아무 대책 없이 뒷짐만 짓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박재우 지회장은 “영안모자 백성학은 코로나 19로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공장을 지탱한 노동자를 해고했다. 해고 노동자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국회의원들이 노동부에 어떠한 질의를 하

고 대책을 받는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정민규 노조 대구지부 한국계이츠지회 조합원은 “국민이 외국투자 자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는 법과 제도를 바꿔 일방 부당 폐업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내일 공장 출입정지 가처분 재판이 열린다. 공장 밖으로 쫓겨 날 거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공장을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형 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부지회장은 “쌍용차를 비롯해 외국투자 기업들이 악랄하게 대한민국 노동자를 짓밟고 철수하고 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땅에서 외국자본에 짓밟혀야 하는가”라고 정부에 물었다.

김은형 부지회장은 “1997년부터 철수를 계획하고 두 번째 철수다. 47년 동안 세금 혜택을 받으며 노동자 피땀을 짜내고 이윤을 가져간 일본 자본이 금속노조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한국산연을 폐업하고 다른 한국공장을 지어 이윤을 만들고 있다. 불법폐업이고 위장폐업”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구조조정, 노조파괴 사업장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며 손 펼침막을 노동부 담장 창살에 매다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금속노동자들은 노동부 청사 주위에서 행진하며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동자 잡는 악법, 폐기가 정답”

28일,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촉구 선언대회 ... “문제인 정부, 자본 위한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노동삼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즉각 폐기하라.” “노동법 개악 말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삼권 보장하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피해 노동자들의 함성이 서울 세종로에 울려 퍼졌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10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촉구 선언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현장 피해 사례를 증언하고, 한목소리로 교섭창구 단일화 법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언대회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이상프라텍지회, 구미지부 KEC지회,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현대모비스충주·현대성우메탈·앤티브지회, 전북지부 현대필터산업분회와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이 참석했다.

2011년 7월 시작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업장 안 노조가 두 개 이상일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하는 제도다. 사측은 유희리를 따져 각 노조와 개별교섭도 할 수 있다. 자본에 교섭 주도권을 넘긴 대표 노동 악법이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측이 마음대로 교섭대상과 방식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줬다”라며 “사측은 제도를 악용해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삼권을 짓밟았다”라고 지적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문제인 정부가 현재 단체행동권과 산별노조 활동을 가로막는 내용의 노동법 개악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노조법 개악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주노총의 전태일 3



법 제정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문제인 정권과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대안 입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라며 “민주노총은 교섭창구단일화 폐지와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해 투쟁을 조직하겠다”라고 선포했다.

전일영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앤티브지회장은 “헌법이 노동삼권을 보장한들 민주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하면 교섭권을 박탈당하기 일쑤이다”라며 “악법은 법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는 교섭창구단일화는 노동자를 잡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섭 주도권 사용자에게 넘기고, 노조파괴 수단 활용

전일영 지회장은 “사측이 금속노조를 없애기 위해 기계번출과 강제전환배치를 시행하고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금속노조는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라며 “노동자만 손해 보고 피해 보는 교섭창구단일화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런 제도는 폐지가 답”이라고 호소했다.

충북 청주에서 자동차 커넥터와 케이블을 만드는 앤티브 노동자들은 지난 8월 금속노조 앤티브지회를 세웠다. 기존 기업노조의 어용 행위와 비민주성에 반발해 기업노조를 탈퇴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사측은 교섭대표노조인 기업노조를 앞세워

금속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탁선호 변호사는 “현재와 관련 법 조항이 효율적인 교섭 체계 구축을 들먹이지만, 조합원 수로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부여하는 발상은 헌법상 노동삼권의 본질에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탁선호 변호사는 “교섭창구단일화의 가장 큰 문제는 교섭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줬다는 사실이다. 교섭대표노조를 사용자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라며 “이런 부당한 구조로 많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탁선호 변호사는 제도가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장 단위 창구단일화를 강제해 산별교섭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월에 서울중앙지법에 교섭이행 청구·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위헌법률제청 신청서를 접수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연말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간다.